ESG 본부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2021년 Vol.4

D R &
A J 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 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5)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격주로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환경부 –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

2021년 5월 30일부터 31일간 제2차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녹색성장 및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P4G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최초의 환경 분야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합니다. 또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의 결과물로 포용적 녹색회복, 탄소중립, 민관협력을 위한 행동계획이 담긴 서울 선언문이 채택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P4G의 주요성과를 발표하면서, 정상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연이은 6월 G7정상회의, 9월 UN총회, 10월 G20 정상회의 그리고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논의를 적극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별첨1][보도자료] P4G주요성과(환경부)_210601

금융위원회 –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녹색금융 특별세션 논의결과

2021년 5월 29일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녹색금융 특별세션이 개최되었고, 본 행사에서는 13명의 고위급 인사들(금융위원장,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세계경제포럼대표, 국제금융공사 CEO 등)이 참여하여 『포스트 코로나19 녹색회복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하였습니다.

[별첨2][보도자료] P4G 녹색금융세션결과(금융위원회)_210529

산업통상자원부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제조' 사업화 지원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6월 7일 재제조(사용 후 제품을 완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복원-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원래 성능 또는 원래 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만드는 제조 공정) 기업의 질적 성장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제조 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사업』 신규 선정기업 35개사를 발표하는 한편, 『재제조 기반 제품서비스 신사업 발굴 실증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문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폐자원을 고부가 산업원료 또는 제품으로 순환시키는 재제조 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 면서 '올해 재제조 산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금속 재자원화 산업 등 순환경제 산업 전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별첨3][보도자료]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재제조' 사업화 지원 본격 추진(산업통상자원부)_210604

주요기사 소개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ESG와 금융시장—쟁점과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금융당국이 2030년까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의무 공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중요한 ESG 정보는 사업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는 기존 ESG관련 정보공시체계를 재정비해 공시 제도를 일원화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기된 것으로, 향후 ESG 정보공시 제도 마련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요 ESG정보, 사업보고서에 의무화해야"(동아일보, 5/27)

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제 환경·사회·지배구조(ESG)는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라며 정부가 규제가 아닌 지원의 관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한 "ESG를 일시적 유행으로 받아들여 '소나기 피하기식'으로 대처하는 기업과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 '근본적 혁신'을 시도하는 기업의 20년 후 모습은 극명하게 대비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홍남기 "ESG, 선택 아닌 생존전략…규제 아닌 지원관점서 최선" (연합뉴스, 6/10)

3. 최근 유럽, 미국 바이든 정부가 ESG드라이브에 나서면서 중국은 ESG관련 주도권경쟁에서 밀리면 기업투자는 물론 중국의 경제, 금융 전반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ESG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탄소배출량은 부동의 1위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다는 점, ESG 펀드 규모가 미국의 10%, 경제성장단계와 사회구조상 미국 대비 S(사회)와 G(기업지배구조)의 평가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시장 일각에선 ESG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신무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향후 자체적으로 ESG 정책 및 제도를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압박 '신무기 ESG' (머니투데이, 6/3)

4. 증권가에 따르면 최근 ESG투자가 확대되면서 IPO 시장에서 ESG를 차별화 전략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바,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한편 ESG 이슈 때문에 상장 추진 과정에서 발목이 잡힌 기업들의 사례도 다수 발견됩니다. IPO시장에서 ESG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전망이며,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기업 이사진에 최소 한 명의 소수자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IPO 업무를 맡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성별이나 인종 등에서 다양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동향을 고려하여 ESG 이슈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SG가 IPO 성적표 좌우한다(한국경제, 6/6)

5. 기후변화가 각국 정부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면서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중앙은행에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온 상승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과 물가,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관련 리스크 연구에 돌입하고 채권 매입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또한 기후변화 관련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후변화와 환경에 주목하는 이유는 '세계 130여개 정부 정책이 기후변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데다 관련 정책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간 기후변화 대응을 정책목표에 추가하는 방침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온 미 연방준비제도(Fed)도 지난해 12월 녹색금융협의체(NGFS)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에도 부는 'ESG 바람'…기후변화 정책 산업구조 영향 '집중점검'(조선일보, 6/6)

6. 세계 최대 시장인 유럽의 탄소배출권 12월물 선물(ICE ECX EUA) 가격은 8일 런던 거래소에서 톤당 52.17유로(약 7만1000원)로 마감하였는데, 이는 1년 전 톤당 22.82유로에서 2배 이상(129%) 상승한 것입니다. EU와 미국 지역의 탄소배출권 가격을 종합해 추종하는 '크레인셰어즈 글로벌 카본 ETF(상장지수펀드·KRBN)' 가격도 지난해 7월 말 상장 이후 10개월 만에 20.09달러에서 34.88달러로 74% 상승하였습니다.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6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권리를 거래하는 시장은 지난해에만 20% 성장해 2290억유로(약 311조원)까지 커졌습니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치솟는 이유는 EU(유럽연합) 때문으로, EU는 최근 1990년 대비 40%로 설정했던 2030년 시점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55%로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대형 발전소나

철강 산업·광업 등 탄소 집약 산업 위주로 돼 있는 탄소배출권의 거래 범위가 해운업, 자동차 운수업, 일반 빌딩 난방 등으로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경우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은 물론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배출권 가격 1년새 두배로… 인도서 배출권 장사한 기업 주가 370% ↑ (조선일보, 6/11)

7. 국회 ESG공동포럼은 한국형 ESG를 논의할 목적으로 지난 3월 발족하였고, 조해진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조해진 국회의원은 "현재 ESG 관련 제도들이 정립되는 초기 단계이므로,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지속가능한 기업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보조자 역할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ESG가 우리 경제에 더욱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확산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조해진 "ESG, 바람 아닌 태풍…한국도 목소리 내야"(이데일리, 6/9)



이상봉 파트너변호사
ESG, 건설/부동산, 기업자문
E sblee@draju.com
T 02-3016-5276



기소현 파트너변호사
ESG, 기업자문, 금융
E shki@draju.com
T 02-3016-8702



노현철 파트너변호사
ESG, 국제, 기업자문
E hcnoh@draju.com
T 02-3016-8730



박경석 변호사
ESG, 기업자문, 에너지/인프라
E parkks@draju.com
T 02-3016-5388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7,8,10~16층
T. 02-563-2900 **E.**draju@draju.com **H.** www.draju.com